

文, 방역 고비 넘기자 다시 경제로... '코로나 장기전' 대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청와대와 방역 당국도 한숨 돌린 분위기다. 그러나 생

업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 방안은 여전히 고심 지점으로 남아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이들의 '숨통 터주

자영업자들 호소에 거리두기 완화 불가피성 역설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 방역 기조 유지 속 장기전 대비해 경제 행보 매진

기에 나섰지만 단편적 조치라는 인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돌발적 집단 감염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흔들림 없는 방역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 장기전'을 대비한 경제 타격 최소화를 위한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보다 속도를 내 경기 회생에 매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자정부터 수도권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지난 한 달간 400명을 상회했던 일일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어 100명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재확산세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소강 국면에 접어들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다시 경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필요에서다. 아울러 특정 업종에게만 희생을 마냥 요구할 수 없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문 대통령이 전날 회의에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 데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던 것도 같은 이유

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까지 흔들림 없는 방역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경기 회생 관련한 행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일단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경제 '풀뿌리'인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대책을 보다 정밀화해 '코로나 장기전'을 대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다시 생기게 되면 방역 조치가 소상공인의 생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며 "가령 9시 영업 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지 비교해 분석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 역시 코로나 장기전을 대비한 주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 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관리하는 조금 더 세련되고 타킷팅을 정확하게 정하는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거리두기 세분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금융기관의 뒷받침을 기반으로 한 20조원 뉴딜 펀드 구상을 제시했다면, 규제 혁신과 민간 투자 견인 행보 등을 통해 국가 프로젝트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일상 속 코로나를 준비할 때가 됐다"며 "코로나 종식이 언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野 '전국민 독감 무료백신' 민주당, 일부 수용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요구를 수용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인 셈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1900만명 정도는 무료 접종하고 1100만명은 유료로 접종키로 했는데 나머지 1100만명도 무료로 접종하면 어떨까는 게 야당의 제안"이라며 "복지위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정의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에 약 1조원이 소요되는 점을 꼬집으면서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 없다"며 "독감 백신을 전국민 무료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마구 던져 보기도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박홍근 의원)라는 부정적 기류가 많았지만 "여야 간에 얼마든지 협의 차원에서

타협하고 수정 가능할 수 있다"(박범계 의원)며 여지를 남긴 반응도 나왔다.

당초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철회하고 그 재원을 전국민 독감 무료백신으로 돌릴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통신비 지급을 유지하는 대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한다는 타협안을 낸 것이다.

이 관계자는 "5000만명 국민 모두에게 예방접종을 하라는 것은 넉넉스다. 원래 예방접종은 100% 하지 않고 60~80% 정도 하면 최대치라고 본다"며 "코로나19와 독감이 같이 왔을 때 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코로나 백신이 없는 대신 독감 백신이라도 많이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3000만명 분량을 확보했는데 그 정도면 물량은 충분하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라는 절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오는 18일까지 4차 추경을 처리한다는 목표 하에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다.

뉴시스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 특별위 기념촬영

주호영(오른쪽 여섯번째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기현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인은 선 굵는데...주호영 "안철수와 연대가 유리해"

김종인 "당내 혼란" 일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대표와의 연대에 연일 선을 긋는 모습과는 대비돼 관심이 쏠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는 정치

는 가급적 통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연대·통합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안 대표의 연일 선을 긋는 모습은 통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접촉면은 넓혀가는 모습이다.

안 대표는 오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참석

해 '야권의 혁신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조직이다.

안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여야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화하자"며 "그것을 위한 첫 단추로 여야 정당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안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 계속해서 거리를 두거나 선

을 긋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대론에 대해 "선을 그은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별로 관심이 없다. 솔직하게"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14일) 이뤄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안 대표 연대론에 "보기에 따라 합친다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당내 혼란을 야기한다"며 "당분간은 국민의힘 역량을 확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